

레드팀/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은 DCA를 곡해하고 현실에 뒤처진 전제를 반복합니다. DCA는 기계적 노동 종언론이 아니며, “주주민주주의” 따위를 확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판을 한 줄씩 들어보겠습니다.

## 1. “노동 소멸 가설” 비판에 대한 반격

비판은 DCA가 완전 실업을 전제한다고 주장하지만, DCA 선언은 그런 전제를 명시적으로 부정합니다. FAQ에서 “노동이 남아도 DCA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언이 ‘완전 실업’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노동이 줄어드는 압력 속에서 자본 접근권 0이 확대되면 소비 기반이 약해진다는 진단을 전제로 한다고 밝힙니다. 즉 DCA는 특정 직무의 자동화가 아니라 임노동이 사회통합의 기본 파이프가 아니게 되는 구조적 전환을 문제 삼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가 “노동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 방식”이라고 반복하는 동안,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눈을 감고 기존 노동 형태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의 운동에 역행하는 반동입니다.

## 2. “사회화의 재정의”와 소유 문제

비판은 DCA가 주주자본주의를 확대한다고 묘사하지만, DCA는 국유화와 물수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선언은 사회화를 국민유화—모든 시민에게 분산된 지분권을 부여해 누구도 자본 접근권 0으로 남지 않게 하는 것으로 재정의합니다. 이는 거대한 국가 기구나 자산운용사가 자본을 다시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과 통제권의 자동 결합을 끊고, 상한·만료·지연·다중승인·로그 같은 헌정 규칙을 통해 통제권 집중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질적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는 비판이야말로 엘리트의 보호막입니다. DCA는 기초지분·금융·정보·교육·시장·의결 접근권을 둑은 \*\*기회자본(opportunity capital)\*\*을 통해 이러한 장벽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려 합니다.

## 3. 금융화와 배당 의존 주장에 대한 반박

DCA가 금융화된 생존을 정당화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DCA는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 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헉제 제도를 설계하며, 긴급 인출과 같은 예외 규칙을 공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정치적 신뢰에 중요하다고 밝힙니다. 배당은 시장 변동에 내맡기지 않고, 데이터·플랫폼·AI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전에 귀속하는 규칙을 통해 안정적으로 분배됩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엘리트가 기업 수익 일부를 ‘자선’처럼 나눠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지대 포획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 4. 디지털 격차와 감시 문제에 대한 반박

DCA는 기술 인프라가 만든 격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회자본에는 정보/교육 접근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디지털 장벽을 제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거버넌스 설계 역시 “기술”이 아니라 헌정을 핵심으로 삼아, 공개감사·다중 분산·포획 방지·사생활 보호·항소/예외·

리스크 레이어를 포함한 프로토콜을 강조합니다.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는다고 해서 감시가 강화된다는 주장은, 국가와 기업이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새로운 구조적 해결을 거부하는 소극적 태도일 뿐입니다.

## 5. 국가 흡수론과 정치 전략

비판은 국가를 계급 억압 장치로 보면서 DCA의 ‘국가 흡수’ 전략을 순진하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국유화 역시 포획의 경로가 될 수 있음을 DCA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국가가 모든 지분을 통제하는 것을 경계하며, **공적 레일과 민간 레일의 완전 분리를 통해 포획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DCA는 기존 국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투명한 인프라 속으로 흡수해 “필요 없어지는 방식”으로 해체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노동조합과 정당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중심의 낡은 언어로는 데이터·표준·알고리즘을 통한 권력집중을 막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실제로 DCA는 대중이 “임금을 올려라” 대신 “**지분 접근권 0을 제거하라**”, “**생산수익 접근권을 권리로 고정하라**” 등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6. 국제주의와 제3의 영역

마르크스주의적 국제주의를 들먹이며 DCA가 국내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DCA의 구조적 제안을 공허한 도덕주의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플랫폼과 데이터는 국경을 넘어 작동하며, **초과이익의 사전 귀속과 지분 접근권의 보편화는 어느 국적의 시민이든 적용될 수 있는 설계입니다**. 그럼에도 낡은 제국주의 담론에 갇혀 새로운 제도 설계를 외면한다면, 그 비판 자체가 **현실의 운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반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DCA는 마르크스주의의 유산을 인정하지만, **노동 이후 사회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제3의 영역에서 출발한 대안입니다**. 다리만 걸쳐졌다는 표현처럼, 마르크스주의가 변하지 않는다면 **반동적 교리로 역사에 퇴장하고, DCA는 그 위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것입니다**.

요컨대, 마르크스주의가 제기하는 비판은 **새로운 모순과 권력 구조를 포착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념은 반동으로 전락한다는 냉정한 선언입니다**.